

| 사회적 대화 현장 |

사회적 대화의 결실, 군산상생형 일자리 모델

양대 노총이 모두 참여해 사회적 합의 이룬 첫 사례
원하청 수평 구조와 상생방안, 미래 신산업 전기차가 핵심

박완순 <참여와혁신> 취재기자

지난 10월 24일 ㈜명신 공장에서 전북 군산형 일자리 상생협약식이 열렸다. 올해 초 광주형 일자리를 시작으로 밀양, 대구, 구미, 황성에 이어 6번째로 태어난 상생형 지역 일자리 모델이다. 6번째지만 그 의미는 남다르다. 양대 노총이 참여해 만든 최초 일자리 모델이고, 대기업 의존이 아닌 중견-중소기업 중심의 원하청 수평 구조와 다양한 상생방안을 마련했다. 전기차라는 미래 신산업을 육성함으로 산업의 지속가능성을 염두에 뒀다. 이날 상생협약식이 열린 ㈜명신 공장은 문을 닫은 GM 군산공장의 자리다. 1년 6개월 만에 공장이 다시 돌아갈 예정이다. 공장 재가동의 부푼 꿈은 군산지역 노사민정이 1년 6개월 동안 이뤄낸 사회적 대화의 성과다.

위기의 군산 경제

2017년 7월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가동 중단과 2018년 5월 GM 군산공장 폐쇄는 군산 지역 경제를 위기로 몰았다. 타격이 심했다. 2016년 기준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와 GM 군산공장이 군산 GRDP에 차지하는 비율은 23.4%였다. 수출액은 약 43%를 차지했다. 일자리 감소 수치도 만 명 단위를 훌쩍 넘었다. 군산조선소 가동 중단으로 협력업체 포함 4,859명이 일



자리를 잃었고, GM 군산공장 폐쇄로 협력업체 포함 1만 2,072명이 일자리를 잃었다. 여파는 협력업체를 넘어 연관 서비스업으로도 번졌다. 연관 서비스업의 휴업과 폐업이 잇따랐다. 지역 산업기반 악화로 군산 시민 1/4이 생계위기를 겪었다.

군산형 일자리 탄생의 산파, 사회적 대화

무너진 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해 새로운 일자리 모델이 필요했다. 고용 창출 효과가 큰 제조업이어야 했고, 지속가능한 미래 먹거리 산업이어야 했다. 또한, 현대중공업과 GM이라는 대기업에만 의존한 산업 구조도 변화할 필요가 있었다.

무엇보다도 이러한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서 두 가지가 유기적으로 결합해야 했다. 하나는 이윤 추구를 위해 많은 제조기업이 생산공장을 해외로 이전하는 시점에서 기업이 국내를 선택하게 할 기제가 존재해야 한다는 점이다. 다른 하나는 만들어질 지역 일자리 모델이 노동자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해야 한다는 점이다. 이 두 가지는 상반된 의제이다. 뒤집어 생각하

면 이 두 가지가 적절한 균형선을 만들면 지역 일자리 모델이 가능하다는 뜻이다. 적절한 균형선을 위해 사회적 합의가 반드시 필요했다.

사회적 합의를 위해 노사민정이 함께하는 사회적 대화는 필수적이었다. 군산형 일자리 모델은 적절한 균형선을 만들어야 한다는 기초 아래 모든 이해당사자들이 모였다는 점에서 긍정적 평가를 받는다. 양대노총 등 지역의 모든 주체들이 참여해 완성도 높은 상생협약안을 도출했다. 특히 다른 지역 상생형 일자리에 참여하지 않았던 민주노총이 상생형 일자리 거버넌스 구축 단계부터 기업유치, 상생협약안 마련, 갈등 중재 등 전 과정에 걸쳐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양대노총이 모두 참여해 사회적 합의를 이룬 사례는 군산형 일자리가 유일하다.

10월 24일 상생협약식에 참여한 문재인 대통령도 “군산형 일자리는 양대노총이 함께 참여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군산 시민들에게 적지 않은 희망을 주리라 믿는다”고 군산형 일자리모델을 위한 사회적 대화를 높이 평가했다.

군산형 일자리, 미래 신산업 전기차 육성

군산형 일자리 모델은 미래 신산업인 전기차를 중심으로 산업 생태계를 꾸려나간다. 기존 내연기관 중심 산업을 탈피하고 주목받고 있는 전기차 산업을 택함으로 산업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했다.

현재 완성차 업체인 (주)명신, (주)에디슨모터스, (주)대창모터스, (주)엠피에스코리아와 (주)코스텍 등 부품업체가 군산에서 전기차 산업을 이끌어 나갈 예정이다. 구 GM공장과 새만금 산업단지 제1공구에 2022년까지 총 4,122억 원을 투자해 17만여 대 규모의 전기 승용·버스·트럭·카트 등을 생산할 계획이다. 동시에 2022년까지 1,900여 개 신규 일자리 창출이 예상된다. 당장 내년부터는 900여 명을 신규 채용할 계획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상생협약식에서 “이제 군산과 새만금 일대에 전기차 클러스터가 새롭게 조성된다”며 “가동을 멈춘 자동차 공장에서 전기차 생산라인이 다시 힘차게 돌아가게 될 것”

이라고 전기차 산업에 대한 기대를 드러냈다.

그러면서 “군산은 전기차 육성을 위한 최적의 장소”라며 “자동차융합기술원과 새만금 자율주행시험장과 함께 자율자동차 테스트베드가 건립되고 있으며, 군산대학교에서는 전기차 전문 인력이 자라고 있어 전기차 개발 시험과 양산에 매우 좋은 환경을 갖추고 있다”고 격려했다.

송하진 전북도지사 역시 “전북 군산은 국내 최대 전기차 생산기지를 기반으로 미래 신산업을 선도해 나아갈 것이다”라고 포부를 밝히기도 했다.

군산형 일자리 모델의 특징은?

군산형 일자리 모델이 다른 상생형 지역 일자리 모델과 견졌을 때 뚜렷한 특징은 양대노총의 참여다. 양대노총이 함께함에 따라 노동자들의 권리를 보장하면서 기업이 성장할 수 있도록 갈등은 최소화할 수 있어 기업의 지속가능성을 한 단계 끌어 올렸다.

대기업이 아닌 중견·중소기업이 지역 일자리 모델을 견인한다는 측면도 존재한다. 소수 대기업 의존도가 높았던 지역 산업 지형을 다수의 중견·중소기업의 협력적 산업 지형으로 재편한다는 점에서 산업 생태계의 안정성을 도모했다.

원하청 수평 구조와 다양한 상생방안을 시도할 구체적 로드맵이 나왔다는 점도 특기할 만하다. 기존 대기업 한 곳에만 납품해 종속적인 수직계열화 구조에서 벗어나 수평적 계열화 협약 방식을 택했다. 납품업체의 개방적 납품을 통해 공동활용을 가능하게 하고, 부품업체의 생산물량 증가에 따른 규모의 경제 실현을 통한 시너지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하청기업이 R&D 노력으로 납품단가를 인하할 경우 하청기업과 수익을 공유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또한, 60억 원 규모의 공동복지기금 조성을 통해 원하청 복지 격차를 줄일 계획이다. 임금 공동교섭으로 원하청 임금 격차를 줄이는 방안도 상생협약에 담고 있다.

노사는 지역공동교섭을 통해 적정임금을, 노동시간 탄력근로제 도입으로 적정 노동시간을 구현할 예정이다. 전국 최초로 도입한 지역공동교섭은 적정임금, 적정노동시간 등 노동조건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각 사업장별 특성에 맞게 재교섭하는 방식을 취한다. 이를 위해 노사가 모두 참여하는 전기차클러스터 상생협의회를 구성하고 운영할 예정이다. 노동자 이사회 참관제, 우리사주제 등을 통해 협력적 노사관계를 구축한다는 목표도 있다. 노사 갈등 발생시 5년 동안 상생협의회 조정안을 수용하도록 규정해 협약의 실효성을 높일 장치를 마련했다.

적정임금 기준에 대한 모호성을 극복하기 위해 전북지역 제조업 평균임금을 지향한다는 기준을 세웠다. 한편 사업장 규모별로 차등화해 적용하며 기본급 비중을 80%로 높여 새로운 임금관리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과도한 초과근무 수당 개선을 위해서다.

근로시간계좌를 도입한다. 근로시간계좌제는 초과노동 12시간 중 4시간만 수당 지급하고 8시간은 계좌에 저축 후 휴가 등으로 사용하게 하는 내용이다. 노동자의 탄력적 노동을 촉진하기 위해서다. 최종적으로는 노동자 워라밸 향상과 기업 인건비 절감을 동시에 추구한다. 이처럼 적정임금과 적정노동시간의 조화로 노동자와 기업이 윈-윈하는 전략을 실험한다.

또한, 지역 내 실직노동자 우선 채용, 지역 내 부품 의무구매, 지역 공헌 사업 추진, 중소기업지원금 조성 등으로 지역 사회와 상생을 위한 협약 내용도 담고 있다.

군산형 일자리 모델, 우려 지점도 있지만 기대도 크다

군산형 일자리 상생협약식이 열린 10월 24일 민주노총과 금속노조는 성명을 내고 우려를 표했다. 민주노총은 성명에서 “상생형 일자리 사업이 아닌 노동기본권 제한 사업”이라고 평했다. “상생협의회가 구성한 별도 기구로 기업·직종별 임금 구간과 인상률을 결정해 통보하고 노사 이견이 발생하면 강제조정도 가능하다. 협약을 어기면 지원금 회수도 가능하다”며 “산별교섭은 저지당하고 5년이라는 시한을 뒀으나 노동자의 자주적 단체교섭권과 단체행동권 제한”이라고 비판했다.

금속노조도 성명에서 “규모의 경제 달성은 어려워 보이고 신차개발에는 지속적이고 전문학적 투자비를 투입해야 하는 현실에서 지속가능한 생산모델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시장성이 담보되지 못한 상태에서 발생할 생산과잉 문제는 전혀 조정하거나 통제할 생각을 하지 않으면서 생산에 투입될 노동의 임금만 통제하겠다는 발상”이라고 비판을 더했다.

이러한 상급단체의 우려에도 최재춘 민주노총 군사시지부장은 “민주노총 중앙이 반대하는 데에는 나름의 이유가 있지만 지역은 또 절실한 지역의 사정이 있다”고 24일 상생협약식에서 입장을 밝혔다.

우려와 다르게 군산형 일자리가 만들어낼 기대 효과는 크다. 군산형 일자리는 GM사태로 잃었던 일자리 2천여 개를 2022년 내 다시 회복하고, 침체됐던 연관 서비스업과 부품산업을 활성화시켜 군산 경제를 회생시키는 데 큰 기여를 할 것으로 전망한다.

주52시간 조기도입과 근로시간계좌제 등 삶의 질 향상과 정부와 지자체의 노동자 복지지원 등을 통한 실질소득 증대로 노동복지 실현도 가능할 것이라고 보고 있다.

더불어 신뢰에 기반한 안정적인 노사문화 정착과 공정한 원하청 관계 구축으로 공정경제와 발전적 노사관계를 구축해 기업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한다. 군산의 규제자유특구 지정과 새만금 테스트베드 등 기반시설을 활용해 세계적으로 수요가 증가하는 전기차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한다는 목표도 뚜렷하다.

군산형 일자리 모델의 미래 전망을 보다 긍정적으로 보는 이유는 밀도 있는 사회적 대화 때문이다. 양대노총이 참여한 지역 노사민정이 지역 경제와 공동체 회복을 위해 1년 6개월 동안 사회적 대화를 쌓아나갔다. 노사가 참여하게 대립해 위기도 있었지만 쟁점 의제별로 토론회를 통해 이견을 좁혔다. 노사민정 컨퍼런스, 심포지엄, 토론회, 공론화 프로그램 등을 통해 시민들의 목소리가 반영돼 시민들이 지지하는 일자리 모델이 만들어질 수 있었다. 지역 노사민정의 치열한 사회적 대화로 만들어진 군산형 일자리 모델덕분에 군산은 다시 활기를 띄기 시작했다.